# 연구위원 3년간 KCI 게재 논문 11건 불과

〈국내전문학술지〉

**통합 광주전남연구원 지역 싱크탱크 거듭나야**

### ㊥ 연구성과 지역상생 기여하나

**일부 기획·정책과제 연 1건도 안해**
**지자체 수탁과제 상당 시간 할애도**
**시장·지사 발표문 작성까지 나서**
**3급 부이사관 대우 등 복지 뛰어나**
**연구성과 편차 크지만 패널티 없어**

38명의 박사 학위 소지 연구위원들이 소속돼 있는 광주전남연구원이 지난 2016~2018년 3년간 연구한 과제는 모두 1092건(중복 포함)이었다. 연구위원 1인당 1년에 평균 12건 정도의 과제를 공동·단독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단독연구는 1~2건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전남연구, 광전리더스인포 등 간행물에 쓰는 보고서는 평균 2~3건이었다.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주제, 기간 등에 따라 기획과제, 정책과제, 지원과제, 수탁과제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이외에 논문집인 광주전남연구, 현안과제를 다루는 광전리더스인포 등을 발간하고 여기에 연구위원들의 글을 싣고 있다. 거시적인 발전방향을 장기간 연구로 제시하는 기획과제는 주로 공동으로,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하는 핵심연구과제인 정책과제, 시·도에서 수시 요청하거나 자체개발한 시급성·현안성을 갖춘 지원과제는 공동·단독으로 연구하고 있다. 대부분 연구위원은 모든 과제를 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들은 기획·정책·지원과제 중 1년에 1건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위원 간 과제 건수에서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일부 연구위원은 최소 2건에서 5~7건만 맡는 경우도 있었다. 15건 이상을 진행하는 연구위원과 양적인 성과만 비교하면 5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과제별로 최대 2~3년을 연구하고 있었다.

이들 연구위원들은 3급 부이사관급 대우에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연구년 운영 등 복지 여건도 뛰어나다는 점에서 연구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 대한 패널티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구위원들이 지자체의 수탁과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1년 평균 6~7건의 지자체 과제를 대부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일부는 1년동안 기획과제, 정책과제, 지원과제 등은 맡지 않고 지자체 수탁과제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매년 연구위원당 2~3건의 보고서를 내놓고 있지만, 국내전문학술지(KCI급) 게재 건수는 미미했다. 연구의 질적 수준이 그다지 높지 못하다는 것이다. 2016년부터 3년간 38명에 이르는 연구위원의 논문 게재 건수는 11건에 불과했다. 2016년 3건, 2017년 2건, 2018년 6건 등이다.

이들 게재 논문의 지역연관도 역시 낮다는 평가도 있다. 논문 주제에 광주·전남, 호남 등이 포함된 경우는 3건이었다. 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원 내에서 연구 실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연구위원들의 외부 활동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연구위원들은 외부 세미나 발표나 토론, 자문, 강의, 교육 등에 참여할 경우 강의료, 자문료 등을 받고 있으나 모두 개인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수입이 상당하지만, 연구원의 공식 수입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근무시간 내 출장을 통한 외부 수입의 경우 일정 부분은 연구원의 자체 수입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연구위원들은 자문 39차례, 발표 16차례, 토론 29차례, 강의 32차례, 교육 7차례 등 모두 123건의 외부 활동을 했으나 2017년에는 251차례, 2018년에는 311차례 등으로 2년만에 2.5배 이상 증가했다.

연구위원들에게 업무 외에 부담을 주는 기타 과제에 대한 관행도 연구원 스스로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연구위원들은 시장이나 지사의 발표문, 방송 원고 작성, 특강 기획 등을 수시로 맡고 있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위원들이 수시로 지자체, 지역 관계자 등과 소통하기 위해서 외부 활동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연구위원들의 출신 대학은 전남대에, 박사 학위는 인문·사회·경영 등 인문계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8명의 연구위원 가운데 전남대가 22명으로, 그 비율은 57.9%에 달했다. 공학이나 이학, 조경학 등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는 12명이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막는 의원은 누구?

**광주시의원 일부 "신중론"**
**심의 일정 19일로 연기**

광주시의회가 특혜 논란을 빚은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조례안 처리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단체 사이의 의견 차이가 커 13일 예정됐던 심의 일정을 연기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연주·김광란·신수정·최영환·정무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발의 의원들은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평가는 인정하지만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에 새마을회에만 자녀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조례 폐지를 놓고 새마을단체와 다른 시민사회단체간에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조례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의원 총회에서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번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확대되자 심의일을 오는 19일로 연기했다.

이날 의원총회가 열린 대회의실 앞에서는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소속 30여 명과 이를 반대하는 새마을단체 회원 60여 명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시민회의는 새마을장학금을 '유신적폐'로 지목하고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으나, 새마을단체는 순수 봉사단체를 폄훼하고 있다고 맞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무등산 고층아파트 2종 주거지 상향 심의·현장실사 문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주장**
**"반대 주민 설명 요구도 불응"**

〈속보〉 무등산을 가로막는 고층 아파트가 건립된다는 지적〈광주일보 2019년 01월 30일자 참고〉과 관련,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가 13일 이 신축 아파트 부지의 도시계획 심의와 관련, 절차적 공정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시 동구 소태동 무등산 인근의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1종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모 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2종 주거지역 상향 심의·현장실사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실사단이 아파트 신축으로 잘려나갈 나무가 있는 현장에 가지 않았으며, 신축 반대 원주민의 설명 요구와 질문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종 상향 심의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단체는 "교통영향평가와 입목도 조사가 정확히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조합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환경파괴·순환도로 터널 인근 산사태 우려,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아파트 신축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소태동 아파트 신축부지 종 상향에 대한 심의를 열어 해당 부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결정했다. 실사는 지난 12일 오후 진행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진단분야 우수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13일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실시해 최근 발표한 법정감염병 진단능력 평가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아 감염병 최종확인 진단분야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법정감염병 진단능력 평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감염병 진단 담당자의 검사능력 및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담당자는 감염병 전문교육을 수료한 후,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진단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법정감염병 44종 69개 병원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감염병진단법 기술 이전을 받아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법정감염병에 대한 최종확인 진단업무와 해당 병원체에 대한 정기적인 진단능력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법정감염병 최종확인 진단업무를 지방에서 수행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업무 경감은 물론 메르스, 홍역 등과 같은 법정 감염병이 신속·정확하게 진단되고 있다. 또 진단을 통해 지역 내 질병 확산방지 및 사전차단 등 감염병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형 자동차 공장 지원** 광주그린카진흥원은 13일 주요 업무계획 공유를 위해 진흥원을 찾은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광주형 자동차공장 연내 착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조직 혁신을 주문하고, 주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시 산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방문하고 있다. 오는 18일 광주도시공사를 네 번째로 방문할 예정이다. 사진은 업무 공유를 마치고 광주그린카진흥원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

## 광주시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강화

광주시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공공·행정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도로청소 강화 등을 통해 단기간 내 대기질을 개선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지자체의 지역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발령 요건으로 시행해 왔지만 전국 17개 시·도가 동일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특별법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중 건설업, 공공기관 운영 대기배출사업장,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등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시행으로 전환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도의회 14일~26일 올 첫 임시회

전남도의회는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 간 일정으로 올해 첫 회기인 '제328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개회 첫날인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장석웅 전남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신안해저유물 전시시설 건립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국의 업무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해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최종 심의·의결한다.

이용재 의장은 "한전공대 유치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3개 사업을 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키우겠다"면서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만큼 새로운 영광의 100년을 설계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전남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올해 총 회의 일수를 지난해보다 3일 많은 127일(정례회 58, 임시회 69)로 정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